

정부행정기관에 있어서 정보처리 관련 용역업체 선정 동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기간(87 91)에는 내무부 주민관리 등 대민편익관련 국가주요 몇몇 행정업무에 국한하여 용역처리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투자 후정산이라는 예산집행 방식으로 전담 사업자인 DACOM이 수행했다. 따라서 국내 200여 행정전산망 사업 참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92년부터 '96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제2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각급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처리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소관업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93년부터는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행정의 민주화과학화가 한층 고조 되어감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정보처리관련 용역거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행정환경에서 본인이 행정기관의 정보처리 관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몇차례 참여한 경험을 통하여 느낀 점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행정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전에 용역개발 제안요청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용역업체 선정 관련항목별로 적절한 가중치(Weight)를 두어 수



金炳奎

총무처 업무분석관

치화한 종합평점을 설정 기준(척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안요청에 응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제안공문을 의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협회로 하여금 특정개발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통보하여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보통 36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내용을 실시하여 확인점검하는 등 서류상의 보완활동을 함은 물론, 업체의 실질적인 개발여력을 평가하는데 참고 하고자 제안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으로 참여업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용역획득에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듯 온갖 정성을 다 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는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느낀 것은 여러 업체중에서 단 하나의 업체만이 선정되고 다수업체가 탈락함으로써 그만큼 그들의 정성어린 노력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다. 최소한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경비라도 행정기관에서 보상했으면 하는 심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가없는 제도 탓 인지는 모르지만, 제안서 내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 소개나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방향에 치중한 나머지, 행정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이나 업무 내용을 살린 실제적인 제안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